



ASAN
2013
기업가정신포럼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New 벤처정책 심포지엄

일시 2013년 2월 20일 (수) 14:00 ~ 18:00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주최 아산나눔재단, 벤처기업협회

후원 매일경제신문, 전자신문, 한국중소기업학회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New 벤처정책 심포지엄



PROGRAM

인사말	정진홍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
축사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송중호 중소기업청장
기조연설	이민화 KAIST 교수

1부.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기술중심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홍길표 백석대 교수
기업회생 및 연대보증제 개선방안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대·중소벤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 (좌장)
주 현 산업연구원 실장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
이병헌 광운대 교수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2부. 고성장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벤처성장을 위한 코스닥제도 혁신방안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장수덕 한남대 교수
벤처 세계화 전략	권기환 상명대 교수

토론

임채운 서강대 교수 (좌장)
정 준 쉐리드 대표
이규연 한국거래소 상무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하태훈 DSC 인베스트먼트 상무

질의 . 응답



인사말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정진홍

아산기업가정신포럼은 아산 정주영님의 기업가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 포럼으로 아산나눔재단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산기업가정신포럼은 그동안 당면한 문제들의 논의를 확산, 심화시켜 이를 실천의 장에서 결실 맺게 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벤처 기업협회와 더불어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New 벤처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진지하고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들이 집약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해 주신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 귀한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매일경제신문, 전자신문, 한국중소기업학회를 비롯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송중호 중소기업청장님께 각별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산나눔재단을 창설해 주시고, 이 포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아산나눔재단 정몽준 명예이사장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럼이 끝나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물론 오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기업협회장 남민우

우리는 지난 2000년의 벤처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1년 IT버블 붕괴 이후에 정부에서 많은 벤처관련 정책들을 시행했었습니다. 벤처인의 한 사람으로써 유감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잘 안되니까 CFO가 전면에 나서서, 벤처라는 기업을 관리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건전성은 좋아지고, 많은 위험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안정되고, 재무적 건전성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활력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100여개 이상이었었는데, 작년에는 10여개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CEO가 나서서 벤처라는 기업을 다시 경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EO가 직접 벤처라는 기업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새로운 사업과 일거리를 만들고, 위험 감수를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의 조정기를 거쳐, 일자리 창출, 경제 재활력화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이 시점에는 CEO마인드를 가지고 벤처정책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많은 교수님들이 좋은 벤처정책들을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페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벤처정책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아산나눔재단 명예이사장 정몽준

오늘 심포지엄 제목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재 시스템을 시장경제 혹은 자본주의라 부르는데, 최근 강조되는 복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잘못하면 너무 물질을 강조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업가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두 번째로 고용입니다. 고용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을 말하는데, 일자리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벤처기업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감춰진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감춰진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벤처기업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 벤처정책에 관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약속 하셨기 때문에, 벤처업계에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대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이 벤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좋은 시기에 좋은 모임을 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셔서 저희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송중호

제가 벤처정책을 16년간 실행하면서 반성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기업가를 육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려고 벤처 정책을 해온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품보다 사람을 만들려고 집중했다면, 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기업가를 육성하려고 했다 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창조경제라는 가치를 내걸고,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벤처 정책도 이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정신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6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도출된 결과들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회가 닿을때마다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조연설 : 창조경제와 벤처생태계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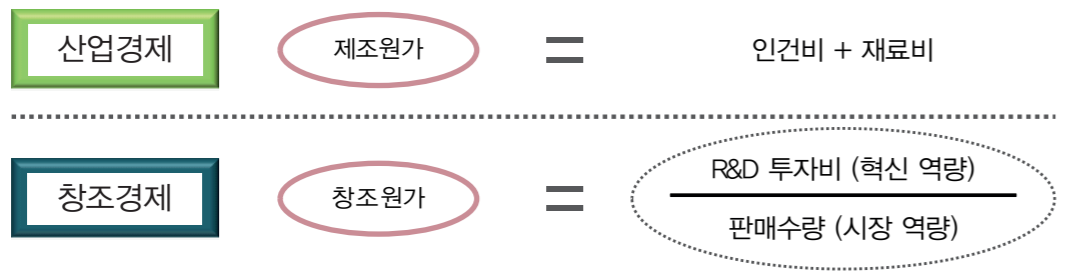


- '한강의 기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창조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성실한 국민성, 원가 중심 전략, 대기업 중심 성장, 실패 방지를 통해 중진국으로 빠르게 성장함
-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성, 가치 중심 전략, 상생 생태계, 실패를 통한 혁신이 중시되는 창조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창조 경제는 '혁신에서 창조성이 실천력보다 중요해지는 구조'로 정의 가능

- 시제품 구현 수단, 시뮬레이션 기술, 외주개발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개발비용이 혁신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창조적 혁신 구현이 용이해져 창조 경제가 일반 산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대기업과 벤처의 비교우위 PARADOX>

	R&D 투자효율	시장확보역량
대기업	1	>20배
벤처기업	>20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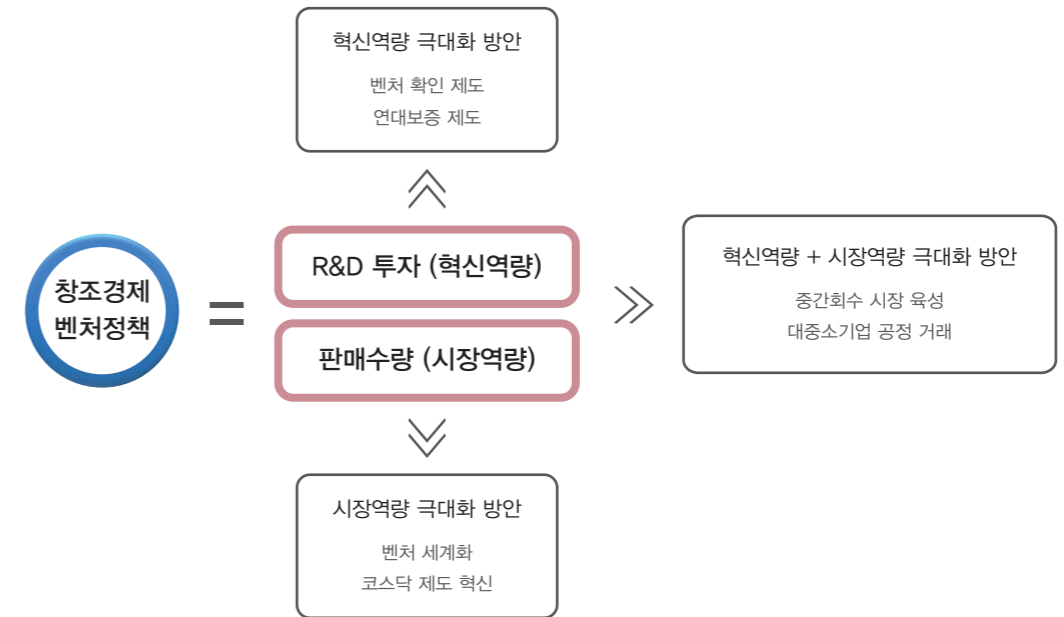
창조 원가를 만족시키려는 단일 기업은 도태

- 창조 경제에서는 창조원가를 만족시키려는 단일 기업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어,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시됨

- 산업경제(인건비+재료비)와 달리 창조원가 산출 방식은 'R&D 투자비(혁신역량)/판매수량(시장역량)'과 같음

- 창조 경제 시대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혁신역량이 높은 창업기업과 시장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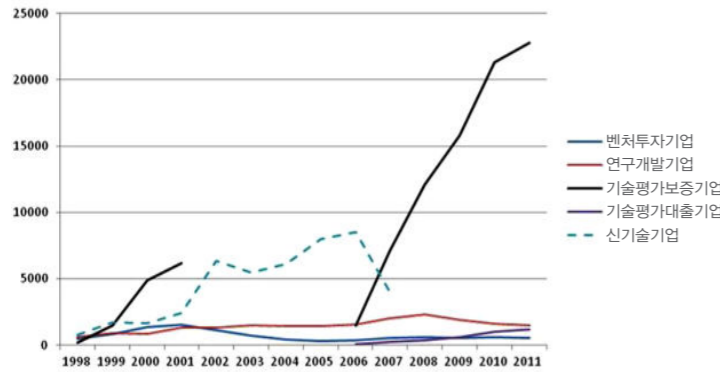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벤처 정책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 및 토론 진행





[1부 주제발표]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기술중심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홍길표 백석대 교수)



- 04년 이후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적 확대에는 성공하였으나, 최근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2006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유형' 벤처 수가 급격히 상승
· '기술평가보증유형' 벤처의 경우 벤처투자기업 및 연구개발기업유형에 비해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미미하여 '벤처기업은 기술혁신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퇴색되고 있음

- 개편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술성 위주 신생기업이 벤처확인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 존재

· 제도개편으로 사라진 신기술기업 유형 중 55%가 벤처기업 지정을 못 받은 반면, '기술평가보증기업유형' 신설로 '기술보다 재무능력이 우수한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에 유리해지는 모순 발생

- 지속적 혁신과 신기술기업 발굴 촉진을 위한 벤처확인제도 개선이 필요

- '기술평가보증유형'에 벤처기업의 핵심 속성인 '기술집약도 과락제' 도입 제안
- '벤처투자유형' 확인 요건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기관 범위 확대(전문엔젤투자자 포함), 투자금액 하향, 자본금 대비 투자 비율 삭제 등이 필요
- '연구개발유형' 확인요건에는 업종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차등화 체계를 유지하되, 투자비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제안
- 업종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신기술 신생기업' 유형 신설로 신기술 및 신생 업종 초기기업의 벤처 확인 용이성 제고

- 중대형 벤처기업 지원으로는 R&D 비율이 높은 중대형 벤처 역시 벤처 확인기업의 대상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 및 기술집약 중견기업 유형을 특화하여 기술개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 제안



기업회생 및 연대보증제 개선방안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패 후 재도전 제도가 중요

-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의 경우 실패 후 재도전 또는 회생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할 경우 창업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음
- 연대보증제도 개선(2012)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제도, 기술가치보험제도, 기술 인프라 구축 등 재기 가능한 제도 보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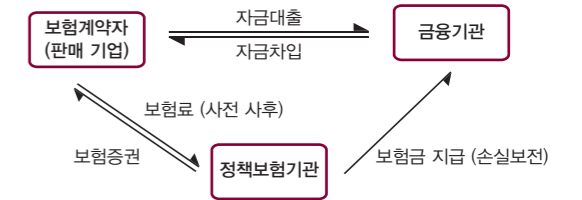
-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2012)을 발표하였으나 채무 부종성 원칙이 정책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문제점 존재

-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 폐지,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 보증
-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기업 회생 시 법인채무가 감면될 경우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되지 않는 문제가 잔존 (부종성 원칙 미적용)

- 채권 원리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나, 회생절차 및 체납세금 등의 부담도 상존

- 기술가치 보험제도 도입으로 창업가의 금전적 부담 완화

- 기술가치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 보험에 가입 시킨 후 가입 기업 부도 발생시 보험료로 금융기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
- 기술보증제도가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보증을 제공하고 부실발생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반면, 보험제도는 보험사가 손실을 보전



-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세금 체납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

- 회생계획인가 등 재기 지원이 승인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가에 대해서 체납세액 징수 유예 확대 또는 체납세금 일부 감면 건의

- 회생 추진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경감을 위한 부종성 확립 방안 검토 필요

- 법무부는 부종성 원칙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
- 부종성 원칙 전면 적용 시 우량기업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저신용 또는 창업기업의 대출 기회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대·중소벤처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이준우 서울시립대 교수)

- 대기업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면서도 불공정 거래행위는 줄어들지 않는 모순적 현상

· 기술 및 설계도 제출요구, 특허 공유 요구, 타기업 거래 제한 등

- 납품 거래 프로세스 상에서도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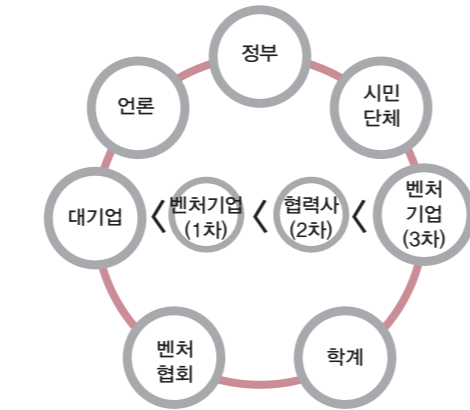
- 납품 전 단계에는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직원의 항응 요청 및 금품 수수 등
- 납품 단계에는 우수 인력 탈취 및 일방적 작업사항 변경과 같은 행위
- 납품 후 단계에는 대금지급 지연, 계약범위 이상 요구 등
- 기술 갈취, 시장 침투, 암묵적 진입장벽 구축, 보복행위, 관계사 끼우기 등과 같은 행위도 상존

- 불공정 거래행위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위축시켜, 사회경제적 건강성과 역동적 활력을 상실하게 함

-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등 전 분야 사회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정부는 보복행위 금지 입법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
- 대기업은 구매윤리경영체제의 실효적 운영, 자율적 관계사 배제 경영, 임직원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교육 등의 노력 필요
- 중소·벤처기업은 불공정 거래행위 적극 신고, 허부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독보적 기술력 확보 등의 노력
- 시민단체, 언론 및 학계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단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 지속 보도와 같은 노력이 요구됨

- 제도 보완책으로 고발건수가 미흡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및 기각사유 공개, 중소기업청장에게 불공정 거래 조사 요구권 부여, 불공정 거래 감시 및 고발을 전담하는 소셜벤처 설립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가속화 및 양극화 심화 등을 유발

· GDP 대비 15대 그룹 자산비중이 2007년 65.1%에서 2010년 83.4%로 증가하는 등 경제력 집중 현상 가속화

[1부 토론] (좌장 :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

주현 산업연구원 실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이 시행된지 15년이 경과되면서, 우리 기업 생태계에 긍정적 변화가 있어 왔음

- 벤처기업 육성정책 논의의 본질은 정책목적의 명확화와 정책대상의 설정에 있으므로 벤처확인제도 개편은 필연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수반함

- 벤처기업 확인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주도라 볼 수 없음
- 벤처기업 확인과 기술보증제도가 사실상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것은 일부 벤처기업에게 벤처기업확인을 위해 필요 없는 기술보증까지 받아야 하는 문제점 존재
-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역시 필요

-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분배 문제나 대기업 때리기로 치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

- 대·중소기업간 선진적 계약 문화와 거래관행 수립을 위한 노력 필요
-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의 핵심 문제는 '낮은 납품단가'이나, 낮은 납품단가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혁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래관행 정착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된 기업 생태계 구축 필요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 평가 보증기관으로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즈 기업 인증 사업을 수행
· 전체 보증잔액의 60%를 벤처기업에 지원 중이며, 벤처 1,000억 클럽기업 중 93.4%와 거래하는 등 벤처기업보증기관 역할 수행

-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기술가치평가 보증제도와 결합됨에 따른 기업 만족도 제고 효과 등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된 경향 존재

· 06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은 벤처기업 확인과 벤처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변경된 제도

- 현재 벤처기업 확인제도로도 성장가능성 높은 초기 기업들이 확인 받고 있음

·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신생기업 선정비율,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 1년 미만 업체의 벤처기업 확인 비율 및 매출액 없는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업 및 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업종별, 업력별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벤처기업 신규 확인 평가에 활용하고 있어 신산업 출현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이병헌 광운대 교수

-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 발전해왔으나, 제도의 취지와 정책 목표상에 근본적 모순이 있어 시장친화적이지 못함
- 벤처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이질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근본적 모순 존재

-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벤처확인과 그에 연동된 벤처기업 지원 규정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벤처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정부의 자금, 기술,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민간 투자 유인을 목적으로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인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통제 필요
-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위험을 연대보증을 통해 창업자와 지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융자 및 보증 방식의 정부 지원이 늘어날수록 실패 기업과 신용불량자는 증가하는 구조
-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엔젤펀드 같은 투자방식의 자금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 (엔젤투자매칭 펀드 확대, 세제 감면 확대 등)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기준이 구체화 되어야 함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 벤처기업에게 제품개발과 대기업과의 커넥션 확보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
- 연구개발로 제품화하여도 대기업 납품 시에 높은 진입장벽 (ex. 공장 실사 시 연구원 이력서 제출 요구 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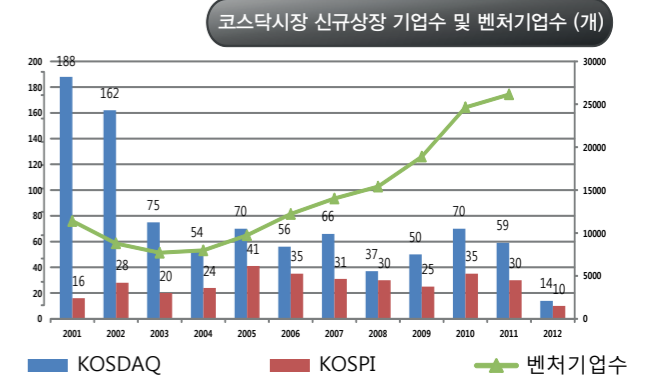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중 어음제도는 대금지급 지연, 대물변제, 대기업 관계사 끼우기와 같은 악순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제도
- 대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2·3차 협력업체까지 흘러감으로 인해 경제 위기 시 도산 도미노 현상의 원인이 됨
- 실패한 기업가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조세 완화가 필요함
- 체납조세에 대한 분납, 분납 시 할증료 경감 등의 제도 도입 요구



[2부 주제발표] 고성장 벤처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벤처성장을 위한 코스닥제도 혁신방안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 05년 자본시장 국제화 촉진과 코스닥시장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
- 벤처기업 수의 지속적 증가에 비해 코스닥 상장기업 수는 정체되어, 벤처기업 자금조달 시장으로써의 기능은 약화되고 유가증권시장의 보조시장으로 전락
-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이라는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이 퇴색 및 역동성이 저하
- 시장간 차별성 저하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해 우량기업의 이탈, 투자자 불신 확산



- 코스닥 시장의 기본 발전 방향은 코스닥 본연의 정체성 확립, 업종 및 기업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 상장 및 운영제도 개선에 있음
- 코스닥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본연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및 시장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혁신 필요
- 별도의 코스닥 거래소를 설립하여 독자적 지위 확보하여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는 방안과 지주회사 자회사 체제로의 개편 방안이 있음
- 회사 잠재력 평가 등 상장 요건 재정립 및 상장 기준 완화 필요
- 회사의 잠재력 관련 정보와 미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의 제공
- 코스닥 상장기업 혜택 확대, 적극적 투자 유치와 거래 활성화로 성장 도모
- 상장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고용확대 및 시설투자 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폭 확대 등의 혜택 부여
- 일정기간 양도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손실 이연을 허용함으로써 투자 활성화
- 기술력 있는 부실기업의 M&A 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M&A 용이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장수덕 한남대 교수)

– 05년 이후 벤처기업 (벤처 1,000억 클럽 포함)의 경제 기여 증가

- 벤처기업 총 매출 380조원 (1,000억 클럽 총 매출 80조원 이상)
- 벤처기업 고용증가율은 중소기업보다 우수 (총 고용인 수 140만명)

– 선진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청년 창업 감소

- 전체 창업의 41.5%가 생계형 창업으로 고성장 벤처 창업 저조
- 신설법인 증가율보다 낮은 청년 창업 증가율은 기업가정신 감소를 의미

– 미국 벤처 생태계는 엔젤투자 활성화와 중간회수 시장의 발달로 지속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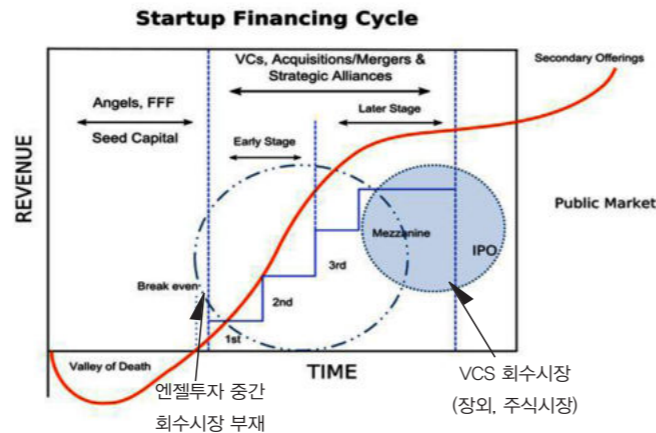
- 벤처캐피탈 투자 비중과 엔젤투자 비중이 대등한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자들의 투자회수가 가능한 중간회수 시장이 발달
- 한국의 경우 중간회수 시장 부재에 따른 투자회수기간 장기화는 엔젤 투자 위축의 가장 큰 원인임

–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불륨 및 기회 확대, 투자 회수기간 단축 제안

-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자금조달 경로 다양화, 중견기업의 엔젤투자자 인정 등의 방안 고려
-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 재투자 유도를 위한 이연 과세,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과세 등 세제혜택 부여 검토
- 4년 이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중간회수 시장 형성 필요

–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혁신거래 활성화 및 거래소 설립 제안

- 주식교환을 통한 M&A 촉진 등 엔젤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개방형 혁신거래 활성화 도모
- 개방형 혁신거래소 설립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혁신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점 관리, 감독



벤처 세계화 전략 (권기환 상명대 교수)

–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화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 요인은 진출 단계에서는 자금, 정보 등의 부족인 반면, 가동 단계에서는 판매처 발굴 및 유지, 현지자금 조달, 정책 지원 부족으로 상이

– IT 기술 발달, 시장/가치사슬 통합, Hidden Multinational 등장, 선진국의 공격적 지원 등 글로벌 환경변화로 인한 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필요

- 인터넷/모바일 기술 발달에 따른 거래비용 저하로 벤처기업 글로벌화 용이
- FTA 확산에 따른 대규모 시장 등장, 가치사슬 재배열과 글로벌 소싱 확대로 벤처기업도 규모의 경제 달성 가능
- 다국적 기업의 운영 특성을 가진 Hidden Multinational 벤처기업 등장으로 국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대상 사업 개발 강화
- 미국은 국가 수출 확대정책(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추진 중이며 독일 및 일본도 수출 확대에 적극 노력

–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개념 및 신흥시장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수립이 중요

- 해외진출 가동단계에서의 지원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의 포괄적 연계성을 가진 정책 수립 필요

– 글로벌화 추진 수준은 개별 벤처기업과 Biz 생태계로, 글로벌화 추진 단계는 진출 초기와 이후 확장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에 따른 4가지 지원 필요

		수출 중소 벤처 기업 네트워크화	중소 벤처 기업 네트워크 세계화
Biz 생태계			
세계화 추진 수준			
		수출 중소 벤처 기업	중소 벤처 기업 현지법인 역량 강화
개별 중소 벤처			
		진출 초기	이후 확장
		세계화 추진 단계	

[2부 토론] (좌장 : 임채운 서강대 교수)

정준 쏘리드 대표



- 벤처기업 글로벌화는 벤처기업 모두의 과제로, 대·중소기업 상생, M&A 활성화 등 벤처생태계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
-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 추진을 위한 인재확보와 해외 사업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 지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 필요

-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공동으로 조성된 펀드로부터 벤처기업들이 Smart Money를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

- 글로벌 사업 추진 인력 양성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함으로 해외 벤처기업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교육기회나 포럼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

- 해외인력 유치 지원정책인 [브레인 스카우팅 사업]의 확대 시행 건의(해외 기술인력 유치 시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 하는 제도)

- 글로벌 비즈니스는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 투자, M&A가 이루어지므로, 국내 벤처기업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지원



이규연 한국거래소 상무

-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된 것은 시장 통합의 결과이므로 지배구조 개선 주장은 비약된 논리
- 시장 건전성 강조로 자금조달 능력이 하락한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

- '기술주-코스닥, 대형주-코스피'로의 상장 유도 위해 시장간 진입요건 차별화

- 코스피 시장 상장요건 상향 조정 및 코스닥 시장 진입요건과의 중첩 방지
- 기업외형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 기술주에 대해 경상이익, 보호예수의무, 최대주주 지분변경 등 진입요건 완화 예정

- 성장성 높은 기술중심 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문화 확대

- 상장특례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기술우량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추진
- 상장 이익 요건 중 대체요건을 도입하여 연 20%이상의 매출성장 기업에게 상장문화 확대 예정

- 고성장/고위험 초기기업 투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코넥스 시장 개설 예정

- 창업 초기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초기 기업 투자자본의 조기 자금회수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

- 건전한 M&A 활성화를 위해 SPAC(특수인수목적회사)제도 실효성 증대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 역할이 중요하나, 높은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자원 배분 부족으로 시장실패 발생
- 벤처 생태계 조성이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갭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활동을 통칭하며 투자 활성화와 성장가능성 제고가 중요
- 벤처캐피탈 자본의 '조달-투자-투자회수'가 선순환될 수 있는 시장 형성과 벤처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

- 벤처기업의 특성상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이 중요하나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유상증자, IPO 등을 통한 조달 건수가 줄어들

- 코넥스 시장 개설을 전제로 중견기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코스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기준은 강화될 수 밖에 없고, 코스닥 시장의 상장기준 하향시에는 코스닥 시장의 레몬마켓화 우려도 존재

- 코스닥 시장은 중견 기술기업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코넥스 시장은 초기 기업 자본조달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 시장 세분화로 인해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가 용이해짐으로써, 투자사이클의 선 순환 구조와 코스닥 진입 기업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하태훈 DSC인베스트먼트 상무

-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 개선보다, 건전성 확보와 성장성 제고 중 치중할 정책의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요건으로 퇴출을 진행
- 성장기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
- 미래 성장성에 대한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상장한 후, 기존 아이টে으로 2-3년간 성장, 공모자금으로 신규사업을 준비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

-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요소로 클래스보팅(Class Voting) 도입 검토

- 클래스보팅권은 투자자가 벤처기업 투자 계약 시 대표이사 해임 및 기업 매각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말함 (캘리포니아주 시행 중)

-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 달라지므로 범용적 처방 지양

-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시 현지 비즈니스 런칭이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해외진출 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검토

- 글로벌 펀드 설립을 추진 중이나 해외 투자자의 주식 스왑 또는 해외 법인 설립 요구 등의 현실적 장애가 존재함

아산나눔재단 소개

아산나눔재단은 2011년 아산 정주영 선생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몽준 의원이 중심이 되어 총 6,000억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글로벌 리더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조성하였고,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초기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아산기업가정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육성사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씽크탱크 등에 매년 500명 이상의 인턴을 파견하여, 우리 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해외 탐방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프론티어' 사업도 수행하고 있고, 해외 청년 봉사단도 운영 중입니다.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New 벤처정책 심포지엄
2013년 2월 20일 (수)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아산기업가정신포럼



글로벌 기업 인턴



해외청년봉사단